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59.4%… 일부 대학 기준 미달

교육부, 의무화 전보다 13.2%p↑
한림대·순천향대, 기준 못 채워
비의대 14개 학과도 기준 미준수

2026학년도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9.4%로 집계됐다. 다만 한림대와 순천향대는 법정 의무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제도 도입 이후 최종 선발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대 의대 26곳의 전체 입학생 2079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234명으로 59.4%를 차지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48명도 포함됐다.

이는 의무선발 제도 도입 전인 2022학년도 46.2%보다 13.2%p(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은 의·치·



교육부 전경.

한·약학 계열의 경우 일반 권역 40%, 강원·제주권 20%다.

그러나 한림대와 순천향대는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원권인 한림대는 입학생 79명 가운데 지역인재 13명

을 선발해 비율이 16.5%에 그쳤다. 법정 기준은 20%로, 최소 16명을 선발해야 했다.

충청권 순천향대는 입학생 113명 가운데 45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39.8%를 기

록했다. 법정 기준인 40%, 46명에 1명 부족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의대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 등 4곳이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는 각각 의무선발 인원 2명을 한 명도 선발하지 못했다. 원광대는 2명 중 1명, 경북대는 3명 중 1명을 선발했다.

의대를 제외한 계열에서는 지역인재의 무선발 대상 204개 학과 가운데 14개 학과가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상지대 한의예과는 입학생 66명 가운데 지역인재 12명을 선발해 비율이 18.2%에 머물렀다. 강원권 한의학 계열의 의무선발 비율은 20%다.

간호학과에서는 김천대와 동양대, 위덕대, 가톨릭상지대, 극동대, 유원대, 을지대 성남·의정부캠퍼스, 중원대, 강동대, 대원대, 세한대 등이 기준에 미달했다. 전

북대 법학전문대학원도 법정 비율 15%에 못 미치는 14.8%를 기록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대상 193개 학과 가운데 28개 학과가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교육부는 합격자의 등록 포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지역 및 학과별 모집 여건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미준수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열·지역별 미준수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가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매년 선발 결과를 공개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제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방학동에 35층·2800가구 들어선다

방학동 638·641 일대 재개발 확정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서울 도봉구 방학동 638·641 일대에 최고 35층, 약 28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방학동 638·64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구역에는 방학동 638 일대 약 1800가구, 641 일대 약 990가구 등 모두 약 28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 지역은 도봉산 자락에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도지구와 인접해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2021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높이 제한과 사업 규모를 둘러싼 주민 간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당초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서울시는 2025년 638 일대와 641 일대를 각각 별도 구역으로 나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두 구역의 경관과 기반시설, 보행로를 연계해 개발하도록 계획했다. 용도지역은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방학동 638 일대에는 용적률 270% 이하, 방학동 641 일대에는 277% 이하를 적용하며, 두 구역 모두 최고 35층·높이 110m 이하로 계획했다.

두 구역 사이 도당로17길에는 높이와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는 기존 계획보다 약 5개 층 높아지고, 계획상 남향 세대 비율은 약 90%에서 100% 수준으로 늘어난다.

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 방향의

조망과 보행 동선을 고려해 주동을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공원·열린마당을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와 경계부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 계획을 반영해 도당로변에는 상가를 배치한다. 시루봉로 변은 건축물 높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단지 경계부에는 중·저층 건물과 외부마당을 조성한다.

방학동 641 일대에는 지상 연면적 3500㎡ 규모의 실버케어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높이 제한을 받아온 방학동 노후 저층주거지가 동북4산과 어우러진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내년부터 학생배치지표 개편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의 학생 배치지표를 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와 자사고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배치지표를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35~36명 수준인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27학년도 35명, 2028학년도 33명, 2029학년도 31명, 2030학년도 3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배치지표를 계속 낮춰 왔지만, 자사고는 최초 지정 당시의 학급당 모집인원을 유지해 일반고와의 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의 배치지표도 재학 비율에 따라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다

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에 모두 학급당 22명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는 22명, 40% 이상은 20명, 60% 이상은 18명을 적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한국어 교육, 생활지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편된 학생배치지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서울형 학생·학교 배치 3.0 기본방향’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배치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북, 日 나라현과 지방정부 협력모델 구축

문화·관광·AI 교류 ‘맞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본 나라현 야마시타 마코토 지사를 만나 문화·관광과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27일 경북도를 방문한 야마시타 마코토 지사를 접견하고 관광 활성화와 경제 교류, 동아시아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양 지역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경북도의 AI 산업 육성과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을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북도와 나라현은 각각 신라와 일본 고대문화의 중심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부산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지난 5월 안동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교류 분위기를 지방정부 협력으로 이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가 27일 경북도를 방문한 야마시타 마코토 일본 나라현 지사와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나라현은 경북과 역사·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지역”이라며 “문화·관광은 물론 AI와 디지털 관광, 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한일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마시타 마코토 나라현 지사는 “양 지역의 문화유산과 첨단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동아시아 공동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10월 열리는 전통주 문화대축제와 문화예술 교류전에 나리현 관계자를 초청하고, 도시재생 사례 공유 등 교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기장군

일광바다축제 31일 개최

기장군이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일광해수욕장에서 ‘제1회 일광바다축제’를 개최한다. 기존에 별도로 열리던 ‘기장갯마을축제’와 ‘일광낭만가요제’를 하나로 통합한 축제다.

일광해수욕장은 금빛 모래가 2km에 걸쳐 펼쳐진 반원형 해안으로, 기장 8경 중 하나로 꼽힌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어린이 동반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동해선 일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다.

첫날인 31일에는 후릿그물당기기, 맨손 고기잡이, 바닷속 보물찾기 등 바다 체험 행사로 시작해 성황제와 길놀이 퍼레이드, 개막식이 이어진다. 저녁에는 미스트롯 출연 가수 채윤, 최지예, 이소나가 출연하는 ‘일광 힐링 콘서트’가 열린다.

8월 1일에는 조개잡이 체험과 비치 프린지 공연이 진행되고, 오후 6시부터 가요제 예선과 초대 가수 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가요제 본선과 초대 가수 공연에 이어 오후 9시 폐막식 후 불꽃축제로 마무리된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안양시, 619억 투입해 미래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9건 유치

안양시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9건을 유치하며 총 6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AI 기술을 행정을 넘어 교통·안전·복지 등 도시 전반에 적용해 미래형 첨단도시 조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AI 관련 핵심 공모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 인프라와 행정서비스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구현에 나선다.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올해 신설한 ‘AI 전략국’이 있다. 시는 AI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축해 부서별로 분산됐던 사업을 통합하고 중앙부처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교통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Sp

rint)’을 통해 시내버스에 엠티AI를 적용한다. 승객 수와 주변 환경을 실시간 분석해 안전성을 높이고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운전석이 없는 레벨4(Lv4) 자율주행 셔틀을 관악역~안양예술공원 구간에 새롭게 운행한다.

또 AI 기반 주차 수요 예측과 음성비서 기능을 활용한 탄력 주차 서비스를 도입하고, 라이더(LiDAR) 기반 공간 인식과 AI 위험 분석을 결합한 교차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도로 위험을 사전에 감지·대응할 예정이다. 도시 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실종자 동선 추적 시스템을 동안구에서 만안구까지 확대하고, 드론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도로시설물 정밀 진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전거도로 합류 구간의 과속·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기술과 재난 예측·대응 시스템도 도입해 스마트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양(경기)=김대의 기자 dykim@